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24호)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92호)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1. 정희용의원안(제2211724호)	1
2. 전종덕의원안(제2211792호)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1. 정희용의원안(제2211724호)	1
2. 전종덕의원안(제2211792호)	4
III . 검토의견	6
1. 제안취지	6
2.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정희용의원안(제2211724호)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7. 25.

다. 회 부 일 : 2025. 7. 28.

2. 전종덕의원안(제2211792호)

가.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7. 28.

다. 회 부 일 : 2025. 7. 28.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정희용의원안(제2211724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

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신속하게 불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하여 종합적, 전략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달린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많은 국민과 농축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농축산물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과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협상 과정에서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2. 전종덕의원안(제2211792호)

주 문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전면적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검역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우리 농업·식량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적 식량·기후위기와 긴장 고조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상호관세 및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미국 트럼프 정부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등 부당한 요구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 및 식량 주권 훼손 없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모든 불공정한 통상 압력에 맞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과 농업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액은 56.6% 증가하였음.

이런 상황에 미국산 사과 수입, 미국산 쌀 추가개방,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등 추가적인 장벽 완화는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됨.

그동안 통상 협상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과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그 결과 20%대 곡물 자급률, 1천만 원도 안 되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 농가 부채, 농촌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한민국 식량 주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하고자 함.

IV.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 한다) 취임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5. 3. 31.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하여 미국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저해하는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였음.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30개월령 이상), ② 쌀 관세율 할당(TRQ) 운영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③ 과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¹⁾) 조치, ④ 유전자변형생물체(LMO²⁾) 규제를 주요 무역장벽으로 꼽았음.

이러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였음(2025. 4. 2.).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2025년 7월 9일로 예정되었던 관세 발효일을 2025년 8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

1)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 Living Modified Organism

리 정부에 발송하였음(2025. 7. 7.).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2건의 결의안은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 과정에서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달린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대미 관세 협상 진행경과 】

일 자(현지시간)	주요내용
2025. 1. 20.	■ 美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취임
2025. 3. 31.	■ 무역대표부(USTR) 「'25년 NTE보고서」 발표
2025. 4. 2.	■ 트럼프 미 대통령 상호 관세 발표(한국: 25%)
2025. 4. 8.	■ 통상교섭본부장 - USTR 대표 면담
2025. 4. 24.	■ 재무·통상당국 2+2 협의 ■ 산업부장관 - USTR 대표 면담
2025. 4. 30. ~ 5. 1.	■ 제1차 한·미 기술협의를(국장급)
2025. 5. 16.	■ 산업부장관 - USTR 대표 면담
2025. 5.20. ~ 22.	■ 제2차 한·미 기술협의를(국장급)
2025. 6. 23.	■ 통상교섭본부장 -상무장관, USTR 대표 면담
2025. 6. 24. ~ 26.	■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실장급)
2025. 6. 27.	■ 통상교섭본부장 - USTR 대표 면담
2025. 7. 5.	■ 통상교섭본부장 - USTR 대표 면담
2025. 7. 7.	■ 통상교섭본부장 - 상무장관 면담
2025. 7. 7.	■ 트럼프 미 대통령 관세서한 발송 및 관세 발효일 유예(2025. 7. 9. → 2025. 8.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과

3) 특히,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30개월 이상 최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확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2.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정회용의원안(제2211724호)

- 2건의 결의안 중 정회용의원안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경고와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 수호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안 각 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음.
- 주문 1은 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협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주문2는 농축산물을 협상의 양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일부 정부 당국자의 인식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업이 지닌 식량안보적 가치와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고려할 때, 정부 당국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농축산계의 불안감과 정책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확고한 보호 의지를 요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문3은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중장기적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

립·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후적 피해보전이 아닌,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문4는 농업인 및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국회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농축산업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종합하면, 정희용의원안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책임 있는 협상 자세 견지, 농축산업계와의 투명한 소통 및 농축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농업인 및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전종덕의원안(제2211792호)

□ 다음으로, 전종덕의원안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상호관세 및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는 농업을 희생시키는 기존의 통상 협상을 중단하고 식량 주권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삼아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안 각 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음.

□ 주문1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통상 압력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문2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등 부당한 요구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근거로 해당 사안들을 협상 불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문3은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 협상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존의 협상 패러다임 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하여 협상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요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문4는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불공정한 통상 압력에 맞서 식량 주권과 농업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농업 문제를 단순한 산업 분야가 아닌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이고 항구적인 의지를 다지려는 취지로 보임.

- 종합하면, 전종덕의원안은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에 해당 요구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게는 농업을 희생시키는 기존의 협상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 주권 수호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희생을 방지하여 농업인 및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